# 목 차

Ⅰ. 서론

Ⅱ. 온라인 광고 사기의 유형과 피해 구조

1. 주요 사기 유형

2. 피해 형태

3. 구체적인 피해 사실

Ⅲ. 대한민국의 법제도 및 대응 현황

1. 법적 규제

2. 피해자 보호 제도

3. 수사 및 신고 방법

Ⅳ.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

1. 예방 지침

2. 정책 제언

Ⅴ. 결론

## 온라인 광고 사기 및 채무 문제(발표자 : 김용석)

Ⅰ. 서론

사이버공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래로 우리는 사이버공간이라는 가상공간 안에서 삶과 문화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상호영향을 끼쳐왔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 여가 생활은 물론 화상회의를 통한 협업,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까지 대부분의 일상 생활을 사이버공간 내에서 영위할 수 있게 됐고, 이러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삶은 코로나19(COVID-19)의 대유행으로 그 활용과 적응이 더욱 빨라졌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편리함과 더불어 각종 다양한 범죄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기 시작했다.

사이버공간의 발전과 우리 일상생활과의 상호작용이 증가 됨에 따라 사이버 범죄는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그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이후 비대면활동이 증가하며 더욱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광고 사기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이 재산을 상실하거나 채무에 빠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계좌를 제공한 경우 형사상 방조범으로 간주되어[1] 형사 및 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개인회생 절차상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본 발표는 **온라인 사기와 금융채무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법제도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Ⅱ. 온라인 광고 사기의 유형과 피해 구조

온라인 광고를 통한 사기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중 가장 사례가 많고, 피해가 큰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최근 한국 검찰은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의율하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강하게 처벌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 1. 주요 사기 유형

• 대출 사기: 허위 금융광고를 통해 급전 대출을 유도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대출 사기는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급전 필요 시 즉시 대출 가능', '신용등급 무관', '무서류 간편 대출'** 등의 문구를 내세운 허위 금융광고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유혹처럼 다가오며, 결국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공식 금융기관처럼 보이는 디자인과 문구를 사용해 신뢰를 유도**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며 피해자를 현혹한다. 광고를 믿고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나 계좌번호(주거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등)**를 제공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공된 계좌가 범죄(보이스피싱, 주식투자사기,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이용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문제는 피해자가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입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형사상 방조범(공범)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제3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기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피해자는 장기간의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

• 투자 사기: 고수익 보장 광고로 투자 유도 후 자금 편취

최근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월 10% 수익 보장', '원금 손실 없음', '단기 고수익 투자' 등의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경제적 불안과 투자 욕구를 자극하며, 많은 사람들을 사기 피해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검증되지 않은 투자처에 대한 경계심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기 광고는 대개 가짜 성공 사례 영상과 조작된 후기 댓글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유혹한다.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해 안심시킨 뒤, 점차 더 큰 금액의 투자를 유도한다. 그러나 일정 시점이 지나면 홈페이지가 폐쇄되고 연락이 두절되며, 투자금은 회수되지 못한 채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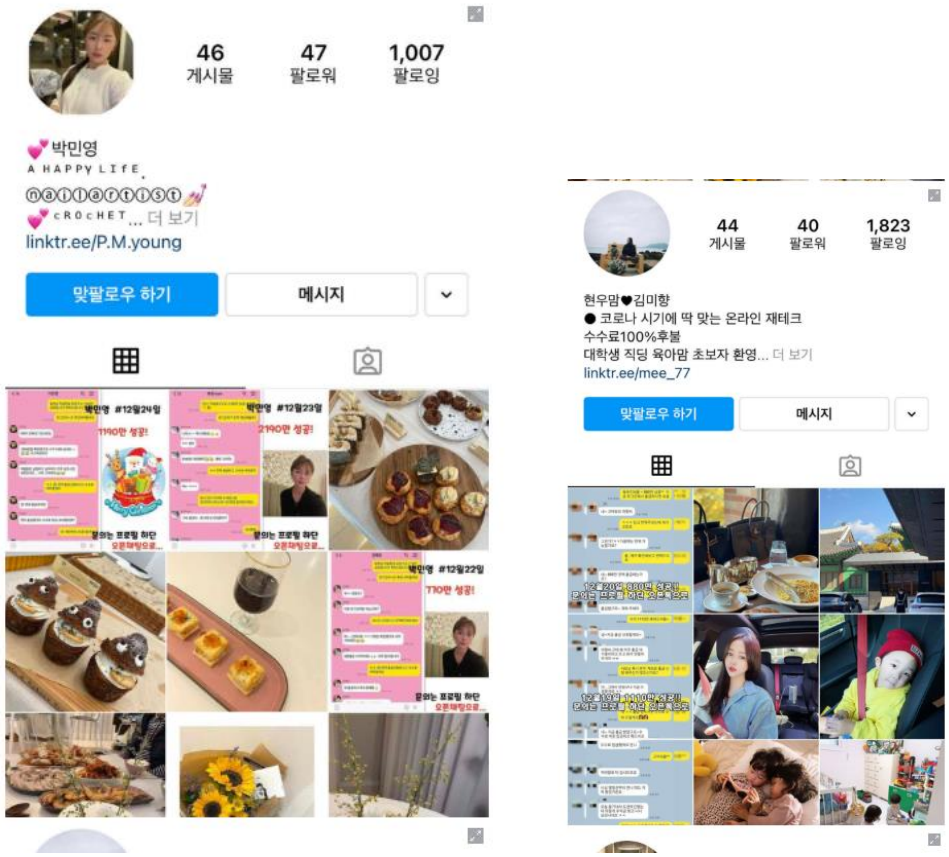
피해자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입는 데 그치지 않는다. 허위 정보로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사기범이 자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 실제 피해 회복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심리적 고통도 상당하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경고 신호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100% 안전",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의심해야 하며, 투자 구조가 불분명하거나 사업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피해야 한다. 투자 전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 수익 구조, 계약서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송금 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되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투자 사기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고의적 기망에 의한 범죄다. 특히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말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며, 피해자는 재산뿐 아니라 법적·심리적 고통까지 겪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사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투자 전에는 반드시 사실 확인과 구조 검토를 거쳐야 한다.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예시 : 이들은 미모의 여성 사진을 기반한 인스타그램을 통해 많은 수익을 줄 것처럼 투자를 유도한 후 돈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

- 계좌 매매 및 대여 : 피해자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계좌만 빌려주면 수익을 나눠준다"는 제안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유혹은 단순한 '알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 자금 세탁, 사기, 도박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수단이다.

**※ 피해 사례**

✔ 사례 1: SNS를 통해 "계좌만 빌려주면 매일 수익 정산"이라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했지만, 해당 계좌가 사기 사건에 사용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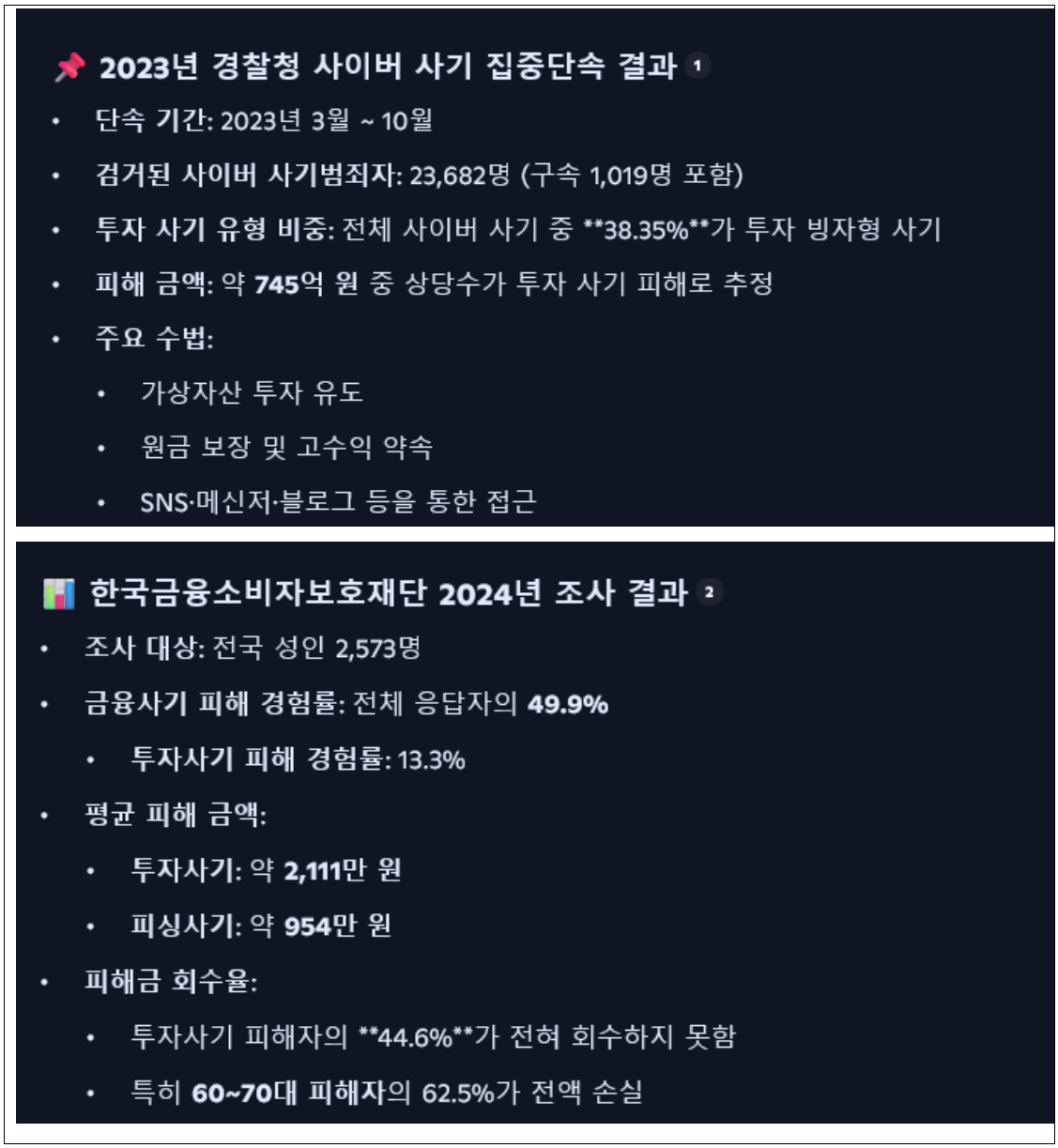
✔ 사례 2: "단순 계좌 관리 업무"라 하여 통장을 넘겨줬지만, 도박 자금 세탁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입건됨

✔ 사례 3: 친구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줬다가, 해당 계좌로 다수의 피해자가 입금한 사기 자금이 확인되어 사기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됨

문제는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범죄 공범(정범 및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계좌를 넘겨준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으며,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이처럼 계좌 대여는 단순한 호의나 부주의가 아니라, 범죄에 연루되는 심각한 행위로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자료**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한 사기 범죄에 대하여 경찰청과 한국 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 2. 피해 형태 - [대출 사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다. 단순히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소비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대출은 필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 역시 대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대출이 우리 삶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출이 일상이 된 이유로 높은 생활비와 낮은

소득의 불균형, 신용카드의 보편화, 주택구매의 현실, 소비 중심의 사회문화, 금융기술의 발전을 들 수 있는데, 이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출로 발생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 상당한 사람들이 대출 사기에 노출되어 있다. 대출 사기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다.

가. 전화·문자 사기

"저금리 대출 가능", "정부지원 대출 승인 완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유인.

상담을 가장해 선입금 요구 또는 개인정보 탈취.

예: 신용보증보험료,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만 원 송금 요구 후 연락 두절

나. 허위 계약서 사기

대출 심사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과도한 대출을 유도.

피해자는 나중에 허위 서류 제출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됨.

예: 매매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

다. 수수료 편취형 사기

"대출 승인을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선입금 요구

이후 추가 비용 요구 → 연락 두절

예: 무직자 대상 대출 광고 후 보증금 요구

라. 개인정보 탈취형 사기

대출 심사를 빙자해 신분증,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등 요구.

피해자 명의로 불법 대출 실행.

예: 당일 대출 광고 후 인증서 비밀번호 요구

마. 저금리 대환대출 사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
예: 20% 대출을 3%로 바꿔준다는 말에 500만 원 송금

바. 신용등급 조작 사기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보증금 요구

실제로는 신용등급 변화 없음

예: 30만 원 송금 후 아무 변화 없이 연락 두절

위와 같은 형태의 온라인 대출 사기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대출을 상담받거나 실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2차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2-1. 피해형태 - [투자 사기]

투자 사기는 온·오프라인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사이버 공간인 인스타 등 SNS를 통해 마치 단시간에 고수익을 얻는 것처럼 광고하며, DM(direct message)으로 연락하라는 광고에 속은 이용자들은 돈을 투자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하거나 세금이 발생했다고 하며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는 형태가 기본적이다.

가. 폰지 사기 (Ponzi Scheme)

- 신규 투자자의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처럼 지급하는 방식
- 실제 수익 창출 없이 자금만 순환되며, 일정 시점에 붕괴(돌려막기)
- "지금 투자하면 매달 10% 수익 보장" 같은 문구로 유혹

나. 유사수신행위

-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업체가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

- "정부 인증 투자 플랫폼", "금융 전문가 추천" 등을 내세움
-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피해 위험 높음

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

- 존재하지 않는 코인이나 NFT를 발행해 투자 유도
- 허위 백서, 조작된 수익률, 유명인 사진 도용 등으로 신뢰 유도
- 초기 수익금 지급 후 추가 투자 유도 → 잠적

라. 정부 보조금·정책 투자 사기

- 정부 지원사업이나 보조금과 연계된 투자처럼 위장
- "정책 자금 연계 투자", "정부 인증 플랫폼" 등으로 신뢰 유도
- 실제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 업체가 자금을 편취

온라인 투자 사기는 인간의 욕망과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든다. 특히 "단기간에 큰 수익"이라는 유혹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 연령, 학력, 직업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가 생기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 2-2. 피해형태 - [계좌 매매 및 대여]

계좌 매매 및 대여가 발생하는 원인은 단순한 무지나 실수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보통 계좌를 매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은 ① 경제적인 어려움과 급전이 필요한 경우인데 신용등급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금융 접근이 어려워 유혹에 쉽게 빠지곤 한다. ② 불법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주변 지인, 가족의 부탁으로 계좌를 대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 발표자가 실제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한 사건에서는 오빠가 주변 지인들에게 사기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동생과 아버지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여동생과 아버지도 공범으로 수사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케이스를 방어해 본 사실이 있다.

다행히도 위 사건은 모두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처분 및 판결 결과로 인해 범죄자의 여동생과 아버지는 민사적 ·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수년간의 법적 다툼 과정에서 형벌 및 금전 배상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와 동시에 발생한 변호사 비용은 덤이다.

③ 대출 알선, 세금절감, 고수익 보장 등의 명목으로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통장을 대여해주는 경우에 발생 한다.

## 3. 구체적인 피해 사실

대출 및 투자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범죄에 연류되어 형사처벌(공범, 방조범)을 받을 위험에 놓은다.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 면책을 제외하고 있는 개인회생, 파산 법제에 따라 평생 채권 추심이 쫓아다닐수 있다.

피해자들이 이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하는 등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져야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계좌의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한 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더라도 과실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민사법 제도 하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 Ⅲ. 대한민국의 법제도 및 대응 현황

### 1. 법적 규제

불법 금융광고 규제 강화: 광고주 인증제(FSV), 플랫폼 책임 강화

[광고주 인증제(FSV)]
구글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금융서비스 광고를 게재하려면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 됨

대상: 금융상품·서비스를 광고하려는 광고주

절차: 광고주는 회사명, 주소, 자격번호 등을 제출
구글은 이를 금융감독원 등록 정보와 대조해 인증 여부 판단

인증되지 않으면 광고 게재 불가
비금융 광고주도 예외 아님 : 예: 자동차 보험을 홍보하는 자동차 딜러
사업 정보와 광고 목적 등을 검토해 타당성 없으면 광고 차단
전자금융거래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 중

[플랫폼 책임 강화]
구글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해 사전심사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
기존 방식: 사후 적발 → 피해 발생 후 대응
강화된 방식: 사전심사 → 불법 광고 자체를 게재하지 못하게 차단

플랫폼이 사전심사에서 이러한 불법광고를 차단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위 광고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플랫폼에게 지우는 것도 검토되고 있음.

## 2. 피해자 보호 제도

### 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운영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지킴이'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전용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법률 지원과 피해 신고,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기능 | 설명 |
| --- | --- |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 불법 대부, 불법 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 사례를 접수 |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채권자와 대응 |
| **불법업체 조회** |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인지 확인 가능 |
| **상담 및 대응 요령 안내** | 피해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법 제공 |
| **접근성 강화** | 온라인 신청 외에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 가능 [1] [2] |

### 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이나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하는 제도.
변호사가 채권자와의 모든 연락 및 추심 대응을 대리하며, 필요시 손해배상 소송까지 지원.

### 다. 정책금융 공급 확대

2025년 기준,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역대 최대인 12조 원 수준으로 확대.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맞춤형 상품을 조기 공급.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직접 대출 지원도 2배 확대(1,000억 → 2,000억 원).

### 라. 종합플랫폼 구축

서민금융 상품과 상담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신규로 구축.
비대면 대출 비중이 59%에 달하는 만큼, 복합상담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예정. 맞춤 대출 추천 기능 강화, 금융교육 연계 등 사용자 편의성 제고.

### 마. 성실상환자 지원 확대

성실상환자에게는 징검다리론을 통해 은행권 신용대출로의 전환을 지원.
신용평가 개선 및 상환정보 공유로 제도권 금융 진입 유도.

### 바. 민간서민금융 연계 강화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2025년 36.8조 원 목표) 및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사잇돌대출 등 민간상품의 공급요건 완화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합법적 대안 제공.

불법사금융의 위험을 피하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금융지원을 받기 위한 대안으로는 대표적으로 햇살론과 소액생계비대출이 있음. 이 두 상품은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 정책 상품으로,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애초부터 대출사기, 계좌매매 및 대여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사. 국선변호인 제도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적 여건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변호인을 제공하는 제도. 형사소송법에 규정.

| |
|---|
| [필요적 국선변호인]<br>법원이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경우: |

-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
- 치료감호청구 사건, 군사법원 사건 등

[임의적 국선변호인]

피고인이 요청할 수 있는 경우:

- 빈곤 등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예: 월평균 수입 270만 원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 아. 서민금융진흥원 정책금융상품 이용

국회에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안정기금 설치가 추진 중.

정부와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기금을 출연해 안정적인 정책금융 공급 기반 마련.

보증 총액 한도 확대(15배 → 20배), 구상권 소멸시효 단축(10년 → 5년) 등 제도 개선 포함.

## 3. 수사 및 신고 방법

관할경찰서(112) 및 금융감독원(1332) 통한 피해 신고 가능.

온라인 신고 시스템 운영 중.

은행에 사고계좌 등록, 계좌 거래 정지 및 해지 요청.

## Ⅳ.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

### 1. 예방 지침

#### 가. 광고 출처 및 등록번호 확인

금융상품이나 대출을 안내하는 광고를 접했을 때는, 해당 광고가 합법적인 금융기관에서 나온 것인지 반드시 확인.
특히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광고에 명시된 등록번호가 실제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
등록번호가 없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광고는 불법사금융일 가능성이 높음.
개인정보 및 계좌 제공 금지.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광고나 메시지는 매우 위험.

계좌를 빌려달라거나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은 불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함.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됨(그러나 휴대폰만 개통하려고 해도 상당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

**나. 고수익 보장 광고에 대한 경계**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무조건 수익 보장" 등의 문구는 불법 투자사기나 사금융의 전형적인 수법.
금융에는 절대적인 수익 보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
이러한 광고는 대부분 허위·과장된 정보로 피해자를 유인.
수익을 강조하는 광고일수록 의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

**다. 합법적인 금융기관 이용**

대출이나 금융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함.
서민금융진흥원,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상담과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부가 지원하는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금융상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불법사금융은 단기적으로는 유혹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피해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함.

## 2. 정책 제언

### 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심사 및 모니터링 의무 강화

불법 금융광고는 포털사이트, SNS, 오픈채팅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 됨. 기존에는 사후적 대응(적발 후 삭제)에 의존하여 피해 예방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전심사 의무 부여: 광고 게재 전, 금융당국 등록 여부 및 적법성 확인하고, 불법광고 자동 차단 시스템 도입: 키워드 기반 필터링, AI 감시 기술 활용

방송통신위원회·금융감독원과 연계: 불법성이 확인된 광고는 즉시 삭제 요청 가능.

### 나. 피해자에 대한 법률·금융 상담 지원 확대

피해자 상당수가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접근 방법을 몰라 고통을 겪고 있음. 특히 불법추심, 고금리 계약,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가 심각.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플랫폼 강화: 피해 신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신청, 대응 요령 안내 및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확대: 오프라인 상담 접근성 향상.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무료 변호사 지원 : 채권자 대응, 소송 대리 등 실질적 보호.

심리상담 및 복지 연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정서적 회복까지 지원.

### 다. 형사처벌 기준 명확화 및 방조범 적용 범위 재검토

불법사금융 범죄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단순 계좌 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됨. 하지만 처벌 기준이 모호하거나 과도한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형사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법 대부, 추심, 고금리 계약에 등에 대한 형량 상향 및 기준 정비가 필요.

방조범 적용 범위 재검토 :

단순 계좌 대여자, 광고 대행자 등에게 미필적 고의 여부를 세분화해 판단.

고의성 없는 행위에 대한 과잉처벌 방지.

범죄이익 환수 강화: 불법 이자·수수료는 전액 환급,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

## Ⅴ. 결론

앞서 다룬 예시 외에도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이[2] 요즘 극성이다. 사이버공간 내에서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는 피해자를 경제적인 파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파탄에까지도 이르게 한다.

이처럼 온라인 광고 사기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금융위협으로 자리 잡고

[2] 로맨스 스캠은 SNS, 데이트 앱 등에서 이성적 관심을 가장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뒤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신종 사기 범죄

있으며, 피해자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금융기관, 플랫폼 사업자, 개인 모두가 협력하여 예방과 대응에 나서야 하며, **법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강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그 피해로 인해 발생한 2차 피해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